

10 오피니언

사설

강사 강의료 인상 논의 필요할 때

강사에 대한 처우는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우리대학 역시 지난 2018년 후마니타스의 시간 강사가 정리되는 등 해당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대학 강사들의 처우는 달라졌을까. 2019년부터 강사법이 시행되며 일부 처우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지난 8년간 우리대학의 강사 평균 강의료는 정체 상태이다. 같은 기간 사립대학 강사 평균 강의료가 19%, 전체 대학 강사 평균 강의료가 28% 상승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경희의 교육철학과 가치관은 경희대학교가 여타 다른 대학교와 변별성을 지니는 이유이다. 이것이 결국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실제로 전임교원을 포함해 우리학교 강의 중 41%를 담당하는 비전임교원은 경희의 교육철학이 학생들에게 원활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강사 강의료 문제 역시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현재 우리대학의 강사 평균 강의료는 51,000원으로 국공립과 사립을 포함한 전체 대학 대비 16,000원, 사립대학만 따로 떼어서 비교해도 5,000원 가량 떨어진다. 타 대학보다 낮은 등록금에 기인한 이유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나 등록금, 비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봐도 우리대학의 평균 강사 강의료는 적정 수준이라 보기 어려웠다.

물론 대학에도 할 말은 있다. 등록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한데 계속해서 늘어나는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우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대학 강의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강사의

처우가 사립대 평균에도 못 미치는 현실은 안타까울 뿐이다. 한편에서 강의료와 강의수준의 상관관계까지 언급하는 것은 다소 과잉이겠지만, 우리대학 강사들이 전체 사립대학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의료를 받는 것에 대해 대학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현재 우리대학의 시간 강의료 결산액은 약 120억 원이다.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약 59%이며 개수로는 약 4,000개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수치 앞에서 과연 대학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할까. 대학의 재원은 한정돼 있으니, 대학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될듯 하다.

평균 68%인 전체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에 모자라는 우리대학의 59%의 수치는 결국 타 대학 대비 큰 규모의 강사진을 운영하는 배경이 된다.

우리대학의 강사 강의료 인상이 쉽지 않은 것 역시 규모에서 비롯되는 바가 클 것이다. 결국 강사 강의료 인상은 사립대 평균에 수렴하는 전임교원 강의 비율 제고, 전체 시간 강사 규모의 축소, 강사 처우 개선 등의 흐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을 정해야 할 일이다.

물론 이론적 수치와 현실의 괴리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적어도 타 대학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점진적인 계획은 필요한 때이다.

강사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자이다. 이들은 경희의 정신을 지닌 인재들을 길러낸 스승이며 경희의 교육철학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이들도 있다. 후마니타스라는 교육철학을 지닌 우리대학이 이들을 더욱 넉넉한 마음으로 포용하기, 경희의 일부로 인식해주길 바란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의자가 갖는 함축적 가치와 일체형 책걸상 교체 필요성

도구적 가치



이진구 기자
ljk6348@khu.ac.kr

강제하는 일체형 책걸상은 이러한 구시대적 교육에 적합한 의자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 훈계하는 것처럼 일체형 책걸상은 학생을 강의실에서 통제해야 할 미숙한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후마니타스 이념’과는 분명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유연한 사고의 확장을 중시하며 자유로운 토론 수업을 지향한다. 학생들의 성숙을 돋기 위함이다. 그러나 일체형 책걸상은 앞만 볼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몸을 움직여 토론 상대를 제대로 마주보는 것마저 어렵게 한다.

의자는 결국 ‘도구’다. 도구는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한 도구가 목적 달성을 되려 방해된다면 도구의 가치는 상실된다. 그렇게 도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적절한 도구로 바꿔야 한다. 오늘날 일체형 책걸상의 가치는 사라졌다. 이제는 ‘후마니타스 이념’에 걸맞는 의자를 찾아야 할 때다.

일체형 책걸상은 무엇을 표현하는 의자일까? 과거 학생은 ‘일방적 정보 전달’을 위한 강의실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존재였다. 앉아있는 사람의 행동과 자세를



만평 통제와 경직

경희대학교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준태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이동건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n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n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피앤디

세시봉

자유의 모순



홍지민 기자
jimin4249@knu.ac.kr

지난 4일 국제기자연맹(IFJ)이 “한국 여당이 MBC에 위협적, 범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한국언론에 대한 자유의 침해를 규탄한다는 성명문을 냈다.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에 유감을 표한 것이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 기관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 사실이나 의견을 보도, 전파하는 것의 자유를 포함한다.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는 법적 대응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이다. 게다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는 MBC뿐이 아니었음에도 여당은 특정 언론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해당 사태에 대해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칼럼에서 “사법부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을 고발한 쪽의 손을 들어준 적이 거의 없다”며 “이 고발은 사법적 판단을 받기 위함보다 정치적 논란을 증폭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을 성역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언론의 보도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법적 조치도 가할 수 있다. 언론 또한 진실 보도의 책임이 철저하게 전제돼야 한다. MBC의 경우 명확한 사실 확인을 한 번 더 거쳤어야 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공영방송의 자격을 의심해 민영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치적 압박은 다소 실망스럽다. 정치인의 실언이 논란을 빚은 이른바 ‘핫 마이크’ 사고는 종종 있었지만, 이토록 언론에 적대적이었던 사례는 없었다. 그간 논란의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고개를 숙이며 논란을 잠재워왔다. 실제로 많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이러한 태도를 바라고 있다. 지난 6일 공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70%가 동의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부터 ‘자유’라는 가치의 인식을 강조해왔다. 9월 20일 UN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연설 제목을 ‘자유와 연대’로 삼아 국제사회와 연대와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에 언론의 자유는 속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